

野 5당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하면 정권 몰락 자초”

민주·조국혁신당 등 용산 집결...국힘 “공수처 수사 먼저” 반대 입장 정부, 오늘 국무회의...거부권 행사시 28일 본회의서 재의결 절차

여야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 원내 지도부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내정자, 기본소득당 옹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총선 참패에도 일방통행 여주행을 한다면 정권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자당 당선인들과 함께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며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면서 “거부권의 오남용은 행정독재 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이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거부권 남용의 위헌성을 논하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면서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제도이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비대위윈도 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특검 추진은 수사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해 정국을 특검으로 도배하고 국정 공백을 일으키려는 시도다”면서 “특검의 목표는 자신들의 사법리스크를 중단시켜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하려는 것이며, 수사당국은 정파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모든 사안에 있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를 만드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민주당이 무리한 조항으로 가득 찬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 목적이 실제 규명이 아닌 비극을 정쟁화하려는 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임을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와의 의혹을 규명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이재명 자체 경호팀 가동

“경찰 근접경호 불가 통보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자체 경호팀을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월 부산에서의 피습 후 강화됐던 경찰의 경호 조치가 4·10 총선 이후 중단된 데 따른 조치라고 민주당은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총선 직후 경찰에 이 대표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이와 관련한 협의를 했지만, 경찰이 ‘총

선 당시 이뤄진 근접 경호는 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총선에 대비해 1월 중순부터 주요 정당 대표를 대상으로 전담 신변보호팀을 가동했다. 이는 통상 선거 14일 전부터 신변보호팀을 운영한 것에 비해 이른 시점에 이뤄진 조치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에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의 과제”라며 “경찰의 소극적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5·18 성범죄 진상 규명, 치유·명예회복 필요”

광주시의회 등 국회서 정책토론회...“법적 제도 만들어야”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향후 당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치유와 명예회복 등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에서 공개한 '성폭력사건 진상규명 조사보고서'가 법적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국가폭력에 의한 성폭력을 최초로 조사·진상규명만 만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강은미·권인숙·윤미향·진선미 국회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5·18과 성폭력:진실규명의 현안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상수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장미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경희 진상조사위 조사4과 팀장이 각각

발제하고, 김민문정 한국어성당체연합 상임대표, 전진숙 22대 총선 당선자(민주·광주 북구을), 이재일 전 국회 입법조사처 성폭력 전담 조사관, 김명권 광주트라우마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진상조사위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해 조사대상으로 검토했던 52건 중에서 최종 심의에 포함된 조사 대상 성폭력 사건은 19건이며, 이 가운데 전 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진상규명이 결정된 사건은 16건이다. 52건 중 나머지 33건은 피해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정신질환 발생 등으로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다.

진상조사위는 대다수 피해자는 강간죄의 성립 요건으로 삼는 '최협의실' (항거불능의 폭행·협박)이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상황보다 압도적인 공포 속에서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진상조사위는 5·18 성폭력 피해자가 ▲군부특재와 결부된 국가폭력의 역사성 ▲성폭력 피해자를 '정

조를 잃은 여성'으로 비난하는 가부장적인 성차별 통념 ▲사회적 통념의 내면화로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는 '역압의 중첩성' 등으로 인해 신체·정신·사회 관계적 영역에서 잇따른 후유증을 겪어 왔다고 결론지었다.

윤경희 팀장은 “국가는 5·18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겪어온 상처와 고통이 반세기를 넘지 않도록 별도의 조사 기구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조직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다는 시의회 5·18특위 위원장은 “44년간 밝혀지지 않았던 역사적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그 중 성폭력 피해는 개인이 아닌 역사·사회적 의미를 가짐에도 진상규명과정에서 늘 뒷 순위로 밀려왔다”며 “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했던 희생과 고통이 축소되지 않고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은 물론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전남도의회, 내일부터 도정질문

전남도의회가 21일부터 도정질문을 통해 전남도 민감·정책 현안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21일부터 이들 간 제 380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를 열고 전남지사, 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및 교육행정 등에 관한 질문·답변 시간을 갖는다.

도의원들은 이를 동안 전남의 핵심 현안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도의원들은 무안공항,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함평빛그린산단 등 광주·전남 상생 정책의 추진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들은 21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해결방안, 데이터센터 경쟁력 확보 전략(이상

최선국 의원), 함평 빛그린산단 공사 지연 대책(모정환 의원), 순천 조계산도립공원의 국립공원화 및 장박골 습지보호지역 추진계획(정영균 의원), 강진의료원 응급실 개선 대책(김주용 의원),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광주·전남 상생 방안(박문옥 의원) 등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를 따져 묻고 대책 등을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22일에는 전남특별자치도 추진 대책(임지락 의원),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노선 변경에 따른 우려(이재태 의원),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공공의료 강화대책(박형대 의원), 전남지역 전세사기 현황 및 지원방안(박경미 의원), 광주·전남 상생발전 정책 추진현황(이규현 의원)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